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25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	제출년월일	2018.08.24.
검토위원	전문위원 최 충 열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재난 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 보호를 위해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안 제1조~제5조)
- 나.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6조~제14조)
-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15조~제19조)
- 라. 재난안전상황실 (안 제20조~제21조)
- 마. 안전관리자문단 (안 제22조~제28조)
- 바. 재난예방 및 대비 (안 제29조~제38조)
- 사. 재난대응 및 복구 (안 제39조~제53조)
- 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안 제54조~제6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8.07.09. ~ 2018.07.29. (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II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재난 관련 기본 조례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상위법령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종합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회재난 지원 부문,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회재난 지원 부문 등을 추가·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본조례로 통합한 후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 본 조례안은 총 5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장 총칙은

-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국민의 권리,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제2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제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구청장의 전속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 같은 조 제4항 하단 부분의 “구청장은 …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을뿐더러,

“관계기관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3조1) 제5호(재난관리책임기관), 제5의2호(재난관리주관기관), 제7호(긴급구조기관), 제8호(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을 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해당 기관들 중에는 국가기관 등 상급기관을 포함하여 각 법인체 및 민간단체(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2])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으로,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 6. 8.]

관계기관 등의 협력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구청장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스스로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더러 조례 규정상, 민간단체 등의 협력요청 사항도 구청장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결과가 되는 오류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안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안 제1절 안전관리위원회, 안 제2절 재난안전대책본부, 안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안 제4절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되었는데

- 안 제1절 안전관리위원회는 안 제6조 내지 안 제14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조2)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등과 함께

2)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2. 30., 2015. 7. 24.>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삭제 <2013. 8. 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전문개정 2010. 6. 8.]

법 제12조의23)에 근거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회의별 구성·기능표 참조).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별 구성·기능 비교표】

구 분	설치 근거	운영 시기	구성(참석범위)	기 능
안전관리 위 원 회	법제11조 제1항	안전 심의 · 조정	-위원장 : 구청장 -부위원장:부구청장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전정책 실 무 조 정 위 원 회	법제11조 제3항	필요시	-위원장 : 부구청장 -위원:안전관리위원회 소속 기관 단체의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안전관리 민 관 협 력 위 원 회	법 제12조의2 제2항	평상시 · 재 난 발생시	-공동위원장(2명) · 부구청장 · 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위원 : 공동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및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평상시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제보 재난발생시 :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협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3)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8. 6.]

- 안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제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서 구의회 의원 2명, 서초소방서장, 서초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육군 제52사단 제211연대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청장의 지휘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해당 기관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의 각 기관장들은 제8호 ‘구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므로

제3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서초구의회 의원도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 제2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 제15내지 안 제19조로,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 대책본부회의, 대책본부실무회의, 상황판단회의 등 각 회의체를 구분하여 그 구성과 기능을 전문화, 세분화 하였으며, 회의별 구성 및 운영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별 구성·운영 비교표】

구 분	설치 근거	운영 시기	구성(참석범위)	기 능
대책본부	법제16조 제1항	재난의 대응·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운영	-본부장 : 구청장 -차장 : 부구청장 -지원협력관 : 재난안전총괄국장 -통제관 : 수습주무국장 또는 보건소장 -담당관 : 수습주무과장 -실무반 : 재난수습관련부서 공무원및책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 명령·통행제한등의 응급조치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 구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재난사태및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대책본부 회의	법제16조 제2항	본부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안전심의 및 확정	-본부장 : 구청장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과장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및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 실무회의	대책 본부장이 정함	필요시	-통제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책본부회의의 안전 사전 검토 통합지원 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 협의
상황판단 회의	대책 본부장이 정함	필요시	-본부장 : 구청장 -재난안전총괄부서장 -소관 재난업무담당 과장 -유관기관 직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실무반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안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은 안 제20조와 안 제21조로,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절 안전관리자문단은 안 제22조 내지 안 제28조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었는데, 이는 법 제75조4)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구성과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성 및 기능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문단 구성·기능 요약표】

구 분	설치근거	운영 시기	구성(참석범위)	기 능
안전관리자문단	법제75조	필요시	단장 및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 안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는

안 제29조 내지 안 제38조로, 재난 예방조치 및 대비훈련,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대피소의 설치·관리 등, 동원체계의 구축 등 복구활동 등에 관한 기능을 전문화, 세분화하고, 이는 관련 해당 법 규정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으며,

다만, 안 제37조(대피소의 설치·관리 등)제2항에서, “구민은 재난 발생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4)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6. 8.]

이와 같은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계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5) 단서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 안 제1절 재난의 대응으로 안 제39조 내지 안 제42조에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조치, 긴급구조 등을 규정하고,

- 안 제2절 재난의 복구로 안 제43조 내지 안 제53조에서 복구활동, 재난지역 적용범위,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 재원확보 등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43조(복구활동 등)제2항에서,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고, 제3항에서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구청장의 명령을 따르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안 제44조 재난지역에 대한 적용범위는, 법 제3조제1호6)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법 제60조7)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 제66조제4항에서 사회재난(법 제3조 제1호 나목)으로 인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복구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안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은

- 안 제54조 내지 안 제60조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 끝으로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시행과 함께 현행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7)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8. 6.][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3. 8. 6.>]

■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재난관리의 종합·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에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표준 조례안과 사회재난 지원 표준 조례안을 추가·보완하는 한편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으로 통합·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로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문 및 권고안, 서울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2] <개정 2018. 4. 30.>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물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센터
99.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